

독일·프랑스·호주·뉴질랜드의 2005년도 예산안



류 덕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dhryu@kipf.re.kr)

I. 서론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로지역은 전통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소비부진의 지속, 수출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통합의 기수로 유럽지역의 경제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올해의 예산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와 사회부조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 또한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개편을 통해서도 근로유인 제고와 기업환경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재정개혁의 선진국들이라 할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2005년도 혹은 2005~06년도 예산안과 분야별 지출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독일¹⁾

1.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

3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독일경제는 2004년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Federal Ministry of Finance, 2005년 5월호.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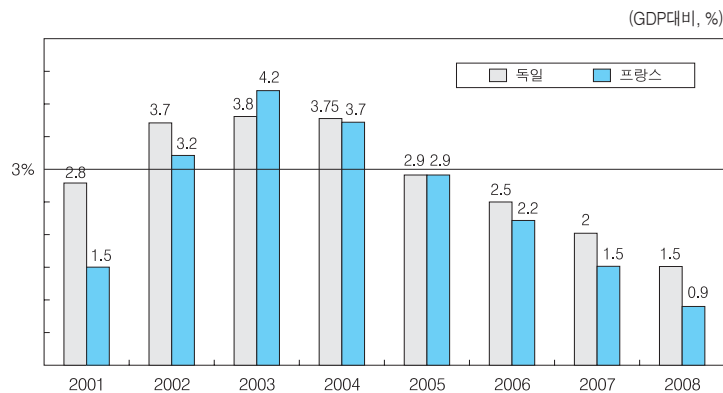
2004년 4/4분기의 높은 실업에 의한 내수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계속되는 수출상승세로 인하여 2005년 경제성장률은 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증대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거래세와 법인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수입이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수회복 없이 수출증대만으로 이루어진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노동시장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노동부문의 재정지출 증대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조세수입 감소와 노동부문의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여건의 개선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2.9%로 억제하여 EU의 '안정·성장 협약'의 상한선(3.0%)을 준수하며, 2008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매년 0.5%p씩 감소시켜 2008년에는 GDP 대비 1.5%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림 1] 독일·프랑스의 재정수지적자 추이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December 2004, Federal Ministry of Finance, Draft Budget Bill for 2005

2. 2005년 예산안 개요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내용은 보조금과 소모성 지출의 축소, 공공부문 인건비 동결, 정부가 납입해야 할 우체국인수기업 보험료 증권화, 글로벌 지출의 삭감, 연금시스템에 '지속가능성 요인' 도입, 실업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의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2,543억유로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재정수입은 2,320억유로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223억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차입은 신규투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독일연방기본법²⁾을 준수하였다.

2) 독일연방기본법 제115조항에 따르면 차입규모는 투자규모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독일의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내용은 보조금과 소모성 지출의 축소, 공공부문 인건비 동결, 정부가 납입해야 할 우체국인수기업 보험료 증권화, 글로벌 지출의 삭감, 연금시스템에 '지속가능성 요인' 도입, 실업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의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독일 2005년 예산안의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FY2004		FY2005	전년대비
	본예산	결산(잠정치)		
조세수입	197,677	187,005	190,786	△3.5
소득세, 법인세	71,759	69,485	71,031	△1.0
부가가치세	76,499	70,053	74,565	△2.1
거래세	1,356	1,461	1,345	△0.8
석유세	43,100	41,782	41,500	△3.7
담배세	15,853	13,630	14,750	△7.0
공공부가금	10,550	10,108	10,286	△2.5
보험세	8,700	8,751	8,900	2.3
세외수입	30,053	24,830	41,244	37.2
경제활동소득	4,193	1,013	2,696	△35.7
이자소득	1,028	951	326	△68.3
차관수익률	11,279	13,588	21,460	90.3
총 재정수입	227,730	211,835	232,030	1.9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Monthly Report 2005년 2월호.

3. 분야별 지출 및 세제개편

독일의 2005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2% 감축한 2,543억유로이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일반 공공서비스 부문 예산이 19%, 일반 금융관리부문이 14.8%를 차지하였다.

사회보장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5% 증가한 1,281억유로가 책정되었고, Hartz IV의 실시로 실업급여Ⅱ(ALGⅡ) 부문에 178억유로가 신규 배정되었으며 보건, 환경, 체육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되어 923백만유로가 책정되었다. 교육·기술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결산보다는 6.5% 증가한 117억유로가 배정되었다.

채신연기금에 대한 정부 전출금의 일시적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자본자산분야 지출이 전년 대비 38.5% 축소된 95억유로가 배정되었으며 농업·산림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15.8%, 주택·지역개발분야 지출이 전년 대비 11.4%, 사회보장분야 중 주거보조금은 전년 대비 54.3% 삭감하였다.

〈표 2〉 독일 연방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04		2005	증감률	비중
	본예산	결산(잠정)			
일반 공공업무	48,433	47,135	47,932	△1.0	18.8
교육, 기술, 연구 및 문화사업	11,887	10,995	11,714	△1.5	4.6
사회보장 및 전쟁관련 보상금	122,583	120,555	128,064	4.5	50.4
사회보장	75,003	74,936	75,182	0.2	29.6
실업보험	5,210	4,175	4,000	△23.2	1.6
실업급여보전금	6,688	18,758	—	—	—
실업급여Ⅱ	—	—	14,600	—	5.7
실업급여Ⅱ	—	—	3,200	—	1.3
(정부주택 및 난방보조금)	—	—	—	—	—
주거보조	1,859	3,009	850	△54.3	0.3
육아양육비	2,985	3,061	2,740	△8.2	1.1
전쟁연금 등	3,367	3,399	3,011	△10.6	1.2
보건, 환경, 체육, 여가	917	909	923	0.7	0.4
주거, 지역개발 및 지역공동체 사업	2,025	1,812	1,794	△11.4	0.7
식품, 농업, 산림관리, 에너지공급 등	7,471	6,545	6,291	△15.8	2.5
운송 및 통신	10,836	10,123	10,522	△2.9	4.1
상업적 사업, 부동산 및 자본자산	15,437	14,311	9,487	△38.5	3.7
일반금융관리	37,711	39,209	37,574	△0.4	14.8
총재정지출	257,300	251,594	254,300	△1.2	100.0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Monthly Report, 2005년 2월.

독일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Tax Reform 2000의 마지막 단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며 9월 1일부터 담배세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을 16%에서 15%로 인하하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2%로 인하하여 이에 따른 감세효과를 약 68억유로로 추정하였다.

III. 프랑스³⁾

1.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

프랑스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4.0%),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가계소비의 증가 등에 의해 2004년 2.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6%로 3년 연속 EU의 '안정·성장 협약'의 상한선(3.0%)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의 4.2%보다는 개선된 모

3) Draft Budget Bill for 2005, 2005년 5월.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 France.

프랑스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4.0%),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가계소비의 증가 등에 의해 2004년 2.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6%로 3년 연속 EU의 '안정 · 성장 협약'의 상한선(3.0%)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의 4.2%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습을 보였다. 국가채무 또한 390억유로(GDP 대비 64.8%)로 유로 의무수준(GDP 대비 60%내)을 초과한 상태이지만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403억유로(GDP 대비 65.0%)로, 재정적자를 2.9%로 안정화시켜 2008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62.0%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상황의 호전에 따라 2004년 예산안보다 총수입 결산액은 약 50억유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총세수는 2004년에 비해 106억유로 증가한 2721.5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거시 · 재정지표

(단위: %)

		2003	2004	2005
독일	실질 GDP 증가율	-0.1	1.1	2.1
	CPI 증가율	1.0	1.1	0.6
	실업률	8.7	8.8	8.5
	총수입(%GDP)	45.0	44.5	44.1
	총지출(%GDP)	48.9	48.2	47.1
	재정수지(%GDP)	-3.8	-3.8	-2.9
	국가채무(%GDP)	65.1	66.9	67.7
프랑스	실질 GDP 증가율	0.5	2.0	2.6
	CPI 증가율	2.2	1.9	1.3
	실업률	9.7	9.9	9.6
	총수입(%GDP)	50.4	50.0	49.8
	총지출(%GDP)	54.5	53.8	53.4
	재정수지(%GDP)	-4.2	-3.7	-2.9
	국가채무(%GDP)	71.1	74.3	76.9
OECD 평균	실질 GDP 증가율	2.2	3.4	2.8
	CPI 증가율(Euro area)	2.1	1.7	1.4
	실업률	7.1	6.9	6.7
	총수입(%GDP)	37.0	36.7	36.9
	총지출(%GDP)	40.7	40.3	40.1
	재정수지(%GDP)	-3.7	-3.6	-3.1
	국가채무(%GDP)	76.0	77.7	78.9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77.

2. 2005년 예산안 개요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구조는 유로지역 의무수준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 유지와 안정, 고용과 성장에 대한 지원,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철저한 정부계획안 시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국민연금 및 군인연금의 지출증가(20억유로)에도 불구하고

하고 강력한 세출 조절책으로 13억유로가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적으로 102억유로가 감소한 449억유로(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감축과 1만 5천유로 한도 내에서 지출비용의 50% 세액공제, 정부차원의 기술투자펀드 확대, 기술교육 비용 및 장비 비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실시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4〉 프랑스 2005년 예산안의 재정수입

(단위: 억유로)

	2004 예산	2004 결산	2005 예산안
A. 세수	3,207	3,281	3,405
1. 소득세	525	535	550
2. 기타직접세	245	256	245
3. 법인세	437	448	503
4. 관세	209	203	202
5. 부가세	1,522	1,560	1,640
6. 인지세, 우표, 기타 간접세 등	269	280	265
B. 환급 총액(부가세, 법인세 및 기타)	-642	-666	-683
A'. 실 세수액(A+B)	2,565	2,615	2,721
C. 세외수입	358	360	356
D. 공공이익에 대한 징수액	-616	-608	-623
총수입(A+C+D)	2,949	3,034	3,138
일반예산 순계기준(A'+C+D)	2,283	2,343	2,430

자료: Draft Budget Bill for 2005

3. 분야별 지출 및 세제개편

2005 회계연도 일반예산 총지출은 1.7% 증가한 2,884억유로이며 지자체 이전 예산이 21.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용과 성장에 대한 지원과 더 높은 사회결속과 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미래에 대한 준비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고용에 대한 독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축과 유형고정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술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고급기술 장비의 설

프랑스의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구조는 유로지역 의무수준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을 유지와 안정, 고용과 성장에 대한 지원,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철저한 정부계획안 시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치를 독려하기 위해 기술교육 비용 및 장비 비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결속력 증진을 위해 2005년도에 10억프랑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법정기준 임금을 증가시켜 구매력을 상승시키며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주택소유를 촉진시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의 감세정책은 없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과표구간을 1.7% 상승시킨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법인세율의 경우,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현행

34.33%의 3%를 감액한 33.3%의 세율을 적용시키기 위해 올해 1.5%의 감세를 하고 2006년에 추가적으로 1.5%를 감세하여 총 법인세율의 3%를 인하하고자 하였다. 일종의 목적세로서 유형고정자산에 부과되는 *taxe parafiscales* 관련 법안을 2005년 12월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및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랑스를 떠난 기업을 다시 국내에 유치시키고자 되돌아 온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본지출 및 고용지출에 관련하여 실시하며, 3년간 10만유로를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표 5〉 프랑스의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분 야	2004	2005	증가율	비 중
외무	4,224.5	4,408.6	4.4	1.5
농수산 및 지방산업 육성	4,976.3	4,887.9	-1.8	1.7
재향군인	3,390.1	3,394.9	0.1	1.2
일반비용	53,456.9	55,158.3	3.2	19.1
환경과 개발	856.4	825.3	-3.6	0.3
경제, 금융 및 산업전반	14,981.9	14,936.7	-0.3	5.2
국가교육 및 연구	70,722.1	72,495.4	2.5	25.1
교통시설, 여행, 해양	14,978.2	14,643.8	-2.2	5.1
사회내부 안전 및 자유	13,203.9	13,498.2	2.2	4.7
지자체 이전 예산 합계	59,954.8	61,791.6	3.1	21.4
전체 국민예산	242,125.1	246,027.0	1.6	85.3
국방예산	41,565.1	42,424.5	2.1	14.7
일반예산 총지출	283,690.3	288,451.5	1.7	100.0

자료: Draft Budget Bill for 2005

IV. 호주⁴⁾

1.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

2005~06년도 호주경제는 2% 수준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증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장률은 2004~05회계연도⁵⁾보다 높은 3%로 전망하였다. 실업률은 현재 5.1%로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

으며 최근 2년 연속 6% 이하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정부는 2005~06회계연도에 89억호주달러의 현금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감면과 노동참여인력(workforce participation) 증대를 목표로 한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재정흑자(GDP 대비 0.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6〉 호주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2.0	3.0	3.5	3.5	3.3
CPI 증가율	2.5	2.8	2.5	2.5	2.5
실업률	5.3	5.0	-	-	-
총수입(%GDP)	23.5	23.1	23.0	23.2	23.1
총지출(%GDP)	22.6	22.2	22.2	22.4	22.3
재정수지(%GDP)	0.8	0.8	0.8	0.8	0.9
국가채무(%GDP)	1.9	0.7	-1.5	-3.4	-5.3

자료: BUDGET OVERVIEW 2005

2. 2005년 예산안 개요

호주정부는 기업과 비법인기업,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소득세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2005~06 총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5년 7월 1일부터 217억호주달러 규모의 개인소득세 감면이 4년 동안 실시되며, 2004~05회계연도에 147억호주달러의 세금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노후연금을 폐지함

으로써 향후 4년간 노후연금 저축을 고양시키기 위해 25억호주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개선시키기로 하였으며 호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투자를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업을 보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4년간 18억호주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투입량과 black hole 지출에 대한 세금면제 조항인 3% 관세율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4) 2005~06 Budget Overview, 2005년 4월, Treasury, Australia.

5) 호주의 예산순기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임.

호주정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217억호주달러 규모의 개인소득세 감면이 4년 동안 실시되며, 2004~05회 계연도에 147억호주달러의 세금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노후연금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4년간 노후연금 저축을 고양시키기 위해 25억호주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7〉 호주 2005~06년 예산안의 재정수입

(단위: 10억호주달러)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9
조세수입	190.2	201.3	209.0	218.8	230.1
(증가율, %)	4.6	1.2	3.1	4.0	3.2
(GDP비율, %)	22.0	21.7	21.6	21.7	21.7
세외수입	12.5	13.2	13.9	14.6	15.2
(증가율, %)	-4.0	1.7	4.1	4.5	2.1
(GDP비율, %)	1.4	1.4	1.4	1.4	1.4
총재정수입	202.7	214.5	222.9	233.4	245.3
(증가율, %)	4.0	1.2	3.2	4.0	3.1
(GDP비율, %)	23.5	23.1	23.0	23.2	23.1

자료: 호주 Budget Paper No.1, 2005~06

3. 분야별 지출 및 세제개편

호주정부는 2005~06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라크 전쟁수행과 같은 국방력 배치를 위해 국방기금을 증가시켰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의료 및 제약분야 서비스와 ‘제약효과 계획’에 따라 신약과 고가의 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호주정부는 근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보조,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재정비하였다. 2005년 7월 1일부터 최저 소득세율은 17%에서 15%로 낮아지며, 42%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63,001호

주달러로 오를 것이며 47%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95,001호주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는 42% 과표기준이 70,001호주달러로, 47% 과표기준이 125,001호주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Senoir Austrians Tax Offset(SATO)에 가입자격이 있는 노인 중 개인은 21,968호주달러까지 부부는 36,494호주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정부는 ‘가정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more support for families and carers)’ 대책으로 세금감면과 소득 과표기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Family Tax Benefit Part B의 최대비율을

2004~05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2억호주 달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세금을 30%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2005~06회

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대략 1억호주달러의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됨).

〈표 8〉호주의 기능별 지출전망

(단위: 호주백만달러)

분 야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일반행정	12,748	12,799	13,067	13,339	13,368
국방	14,190	15,0	15,851	16,791	17,238
치안	2,490	2,721	2,792	2,860	2,892
교육	14,533	15,729	16,541	17,336	17,905
건강	35,541	37,544	39,041	40,937	42,812
사회복지	83,814	87,564	92,138	95,943	99,789
주택 및 설비	1,887	1,968	2,003	1,992	1,894
문화	2,473	2,670	2,575	2,563	2,472
에너지, 연료	3,871	4,212	4,198	4,340	4,848
농림수산	2,263	2,520	2,571	2,408	1,622
광업, 건설, 제조	1,754	1,916	1,820	1,802	1,833
교통, 통신	2,723	2,806	2,972	3,042	2,879
경제부	4,782	4,782	4,923	5,100	5,013
기타	11,943	13,250	14,314	16,948	22,022
총 세출	195,012	206,081	214,806	225,400	236,568

자료: 호주 Budget Paper No.1, 2005~06

IV. 뉴질랜드⁶⁾

1.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

2004년 12월까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4.8%였으며 실업률은 3.6%로 낮아졌다. 경제성장은 2004년말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6년 2.3%, 2007년 2.5%까지 떨어질 것이나 2008년에는 3.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무역과 수출둔화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7% 가까

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4~05회계연도 조세수입은 425억뉴질랜드달러였으며 2005~06회계연도 조세수입은 460억뉴질랜드달러(GDP 대비 30.5%)이며 재정수입은 652억뉴질랜드달러 규모로 예측하였다. 한편,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39.5%로 2004~05회계연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5~06회계연도 국가채무는 357억뉴질랜드달러(GDP 대비 23.7%)로 2004~05회계연도

6) Budget 2005, 2005년 5월. Treasury, New Zealand.

뉴질랜드 2004~05회계연도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가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2005~06회계연도 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근로기반 저축(work-based savings)인 KiwiSaver 계획안을 통해 저축을 고양시키며, 생산력 향상을 위한 세금보조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구매력 유지를 위한 기초 개인세금을 새로이 지수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368억뉴질랜드달러(GDP 대비 26.2%)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채무는 2004~05회계

연도 GDP 대비 26.2%에서 2008~09회계연도 21.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9〉 뉴질랜드의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3.4	2.2	2.8	3.4	3.0
CPI 증가율	2.8	2.6	2.7	2.3	2.0
실업률	3.5	3.7	4.1	4.3	4.5
총수입(%GDP)	43.0	43.3	44.1	44.1	43.6
총지출(%GDP)	37.8	39.5	39.9	40.9	41.4
재정수지(%GDP)	5.3	3.9	4.3	3.3	2.3
국가채무(%GDP)	26.2	23.7	23.2	21.9	21.8

자료: Fiscal Outlook 2005, New Zealand

2. 2005년 예산안 개요

2005~06회계연도 뉴질랜드 정부 예산안은 사회 ·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령화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등의 재정전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4~05회계연도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가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2005~06회계연도 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근로기반 저축(work-based savings)인 KiwiSaver 계획안을 통해 저축을 고양시키며, 생산력 향상을 위한 세금보조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구매력 유지를 위한 기초 개인세금을 새

로이 지수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신규 경상지출은 2005~06회계연도에 20억뉴질랜드달러 규모이며, 2008~09회계연도에 27억뉴질랜드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4년간 신규 자본지출은 18억뉴질랜드달러 규모이며, 2005~06회계연도에 뉴질랜드 노후연금기금(NZS: New Zealand Superannuation)에 23억뉴질랜드달러 규모의 기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후연금기금의 가치는 2005년 6월 30일 현재 65억뉴질랜드달러에서 향후 4년간 194억뉴질랜드달러 규모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10〉 뉴질랜드 2005~06년 예산안의 재정수입

(단위: 백만뉴질랜드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세수입	42,532	45,976	48,102	49,445	51,091	54,343
세외수입	17,855	19,289	20,668	21,793	22,765	23,813
총재정수입	60,387	65,265	68,770	71,238	73,856	78,156

자료: The treasury, New Zealand

3. 분야별 지출 및 세제개편

2005~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개인임금으로 저축을 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work-based savings인 KiwiSaver를 창설하기로 하였으며 KiwiSaver계좌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1,000뉴질랜드달러 규모로 선행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보건부문에 대한 43억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기금(Health Funding Package) 19억뉴질랜드달러와 추가 정부투자로서 이루어져 있다. 교육시스템에 14억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신규지출이 배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목표 주택확보와 토지개발을 위한 주택기업(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병약자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2천7백만뉴질랜드달러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1천9백만뉴질랜드달러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국방유지비(Defence Sustainability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천1백만뉴질랜드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장기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클랜드에 4억 1천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직접투자 관련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을 폐지하고 단기자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없애며 저가치 자산(기준; 9억 7천7백만뉴질랜드달러)에 대한 편의비용을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의 소득에 대해 임시소득공제를 해 줌으로써 해외인력 투자를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연 2%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표기준을 상위층은 60,000뉴질랜드달러에서 63,672뉴질랜드달러로, 중위층은 38,000뉴질랜드달러에서 40,324뉴질랜드달러로, 하위층은 9,500뉴질랜드달러에서 10,081뉴질랜드달러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최저세율은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막대한 수요,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장동력의 소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투자 등은 우리의 재정구조를 언제든지 허약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의 예산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예산편성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뉴질랜드의 기능별 지출전망

(단위: 백만뉴질랜드 달러)

	정부(Total Crown)	중앙정부(Core Crown)
사회안전, 복지	16,038	14,252
GSF 연금지출	660	660
보건	7,623	8,111
교육	8,349	7,585
중앙정부서비스	1,670	1,741
법과 질서	2,022	1,843
국방	1,259	1,311
운송, 통신	5,443	1,461
경제 산업서비스	4,070	1,192
1차 서비스	1,074	368
문화 여가 유산	1,609	634
주택 및 지역단체발전	615	139
기타	52	52
재정비용	2,602	2,252
net foreign-exchange(gains)/losses	-29	7
총재정지출	53,057	41,608

자료: Fiscal Outlook 2005, New Zealand

V. 결론

우리는 위에서 독일, 프랑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2005년도 예산안과 분야별 지출을 살펴 보았다. 이들 국가의 예산안은 각 나라의 경제환경과 정책적 지향점, 그리고 정치적 지형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하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나라의 예산안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이 투영되어 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의 국가들은 최근의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억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 동안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GDP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유럽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3% 재정수지 적자/GDP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수지 흑자국은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개편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편

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든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막대한 수요,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장동력의 소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투자 등은 우리의 재정구조를 언제든지 허약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선진 각국들의 예산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예산 편성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DI**

[그림 2] OECD 주요국의 재정수지 적자 추이

